

윤성오·몽골제국의 후예로서의 명나라
데이비드 로빈슨의 『Ming China and Its Allies: Imperial Rule in Euras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 『Ming China and Its Allies: Imperial Rule
in Euras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

데이비드 로빈슨 (David M. Robinson)은 그의 저서인 『Ming China and Its Allies: Imperial Rule in Eurasia』에서 명나라 초대 황제들 중에서 비교적 많이 다뤄진 永樂帝 朱棣와 함께 正統帝/天順帝 (英宗) 朱祁鎮 (1427-1464, 재위 1435-1449, 복위 1457-1464)의 재위기간 동안의 대외관계와 정책을 집중 조명했다. 이를 통해 그는 몽골제국의 유산이 한족왕조인 명나라에 의해 어떻게 '계승' 및 '유용'되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제도 보다는 명 황제들이 여러 몽골 왕공들과 맺었던 관계에 주목하면서 이를 통해 명초 60년간 황제들의 통치 방식과 그들이 중국을 넘어 전 유라시아 대륙의 통치자로서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해 나갔는지를 추적 하였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원이 중국 대륙에서 밀려났다고 해서 곧바로 몽골

* 尹成午,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제한국학센터, sungoh.yoon@nyu.edu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1.43..163>

제국의 유산이 명에 의해서 완전히 일소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서론에서 강조했다듯이 여전히 적지 않은 연구에서 명의 건국이 몽골잔재의 청산으로 귀결됐다는 식의 전제나 논리가 기저에 깔려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자는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아예 초대 명황제들이 몽골왕궁 및 귀족들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했었는지를 보여주기로 결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그는 명이 그의 주변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몽골 세력가들과 맺은 관계의 목적이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부차적으로 문화적 교류와 외부 기술의 습득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그의 저서에서 15세기 명황제들의 대외활동을 집중 조명하면서 그들이 정치적,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몽골 세력과 ‘유착관계’를 맺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명이 외부 세계의 세력들과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결코 ‘고립주의’로 일관하지 않았었다는 점 또한 상기시켜 주었다.

이 책은 서론과 결론 외에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서는 저자 자신이 품어왔던 문제의식을 소개하면서 앞서 언급했던 점들에 대해 상세히 기술했다. 1장과 2장에서는 영락제 주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뤘다. 저자는 명 조정의 고위관료들이 남긴 여러 수기 등을 활용해 영락제의 정치활동과 함께 그에 관한 기록들이 당시 그의 모습을 어떻게 재구성했으며 그 결과 그의 정치가로서의 성격이 어떻게 재단 및 각색됐는지를 보여주었다. 영락제는 머나먼 중앙아시아의 깊숙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던 몽골 세력가들까지도 자신의 인적 관계망에 포섭시켰고 지속적인 교류를 원했으나 그를 수행했던 당시 관료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실들을 숨기거나 은폐 및 축소하고자 했던 것이다. 자연히 영락제 관련 여러 기록들은 물론 실록과 함께 공식적인 기록에서조차도 그가 몽골 세력가들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자 했던 면모가 드러날 수 없게 된 것이다 (87쪽). 이를 통해 영락제과 그의 신료들이 구상했던 이상적인 중국 황제의 모습 간에는 큰 괴리가 있었음을 실감할 수 있다. 명 조정 신료들 입장에서는 중국 본토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정사를

논하는 것이 중국 황제다운 면모라고 봤던 반면에 정작 영락제 자신은 몽골제국과 같은 세계제국의 지배자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이를 입증해 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까지 여겼던 인물이다. 다시 말해, 영락제는 몽골 지배자들과 과도 관계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아우르는 통치자로서 인식되기를 갈망했던 것이다. 이를 통해 명 황제들이 적어도 15세기까지는 내륙아시아의 지배자로서의 정체성을 간직했음을 엿볼 수 있다.

제3장에서는 명 조정에서 정무에 직접 간여했던 몽골인들이 그들이 본래 섬기던 통치자에서 명 황제에게로 전향해 충성을 바치고 그를 위해 일하는 신료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그들이 담당했던 역할을 증점적으로 다뤘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들 몽골인들도 자신들의 본거지에서 이미 상당한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귀족 출신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선불리 명 황제에게로 전향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자신들의 본래 거주지에서 영향력이 감소했기 때문에 했던 선택 또한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역시 명의 향방을 예의주시하면서 명이 과연 중국을 지속적으로 지배할 수 있을지 아니면 잠시 중국 밖으로 밀려나 북원이 되고 말았던 몽골족의 원이 다시 세력을 규합해 옛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지를 타진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이 중원대륙에서 밀려나간 뒤로도 동향을 지켜보면서 명이 안정적인 지배체제를 확고히 확립했다고 판단되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명 황제를 선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4장과 5장은 명 정통제 주기진이 오이라트 몽골의 추장인 에센에게 납치당했던 사건인 ‘토목의 변 土木之變’ (1449)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명과 몽골을 위시한 주변의 여러 지배자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다시 조율되고 설정되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명 황제가 주변의 여러 통치자들 즉, 오이라트, 몽골 칸국, 동몽골, 여진인 그리고 조선으로부터 일종의 ‘신임’을 얻고자 에센과 경쟁을 벌였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지배자로서의 정통성을 확보 및 입증하는 데에 필수적인 칭기즈칸의 유산을

계승 및 유용하는 법을 터득해 명 황제가 정통계승자이자 유라시아 세계의 보호자로서의 자질을 두루 갖춰움을 설득시켜야 했던 것이다. 물론 조선을 상대로도 원대에 만들어진 관행 등을 조공체제에 대입해 외교관계를 수립 및 운영해 나갔다.

비록 이 책은 명초 조선과의 관계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쓰인 것은 아니지만, 조선과 함께 발전시켜 나간 조공체제에도 분명 몽골제국의 유산이 다분했다. 이 점은 정동훈 교수의 여러 연구논문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그는 특히 고려시대 대외관계사를 연구하면서 원 간섭기의 고려와 몽골 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사건과 에피소드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된 관행으로 굳어지고 심지어는 아예 정례화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제도로 발전 및 정착했음을 밝혀냈다. 정동훈은 우선 몽골제국이 소위 말하는 ‘조공체제’라는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형성되는 데에 상당히 중요하고 결정적인 기여를 했음을 지적했다. 즉,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조공체제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지배자를 중심으로 한 일원적인 천하질서부터 완벽하게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중국역사상 최고로 완성되었던 시기가 몽골제국 시대였다. 첨언하자면 조공체제라 함은 중국 본토에 있는 지방정부에 적용되었던 여러 제도들 즉 예제와 관제를 외국에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만 통용되었던 관료제의 원리와 원칙을 외국의 군주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논리가 마련되어야 했다. 정동훈은 1281년에 고려에 설치된 정동행성에 주목하면서 당시 고려 국왕이 원 황제에 의해 장관직에 임명된 점을 들어 관료제적 운영 원리가 중국 밖에 있는 외국 군주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계기가 되었음을 지적했다. 특히 중국 황제가 주변국들에게 달력, 즉 曆書を 정기적으로 반포하는 관행이 확립된 계기 역시 고려에 설치된 정동행성을 지방행정기관의 하나로 간주하고 중국 국내의 다른 지방에 하듯이 동일하게 역서를 반포하면서부터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명청 시대 내내 중국 조정에 정기적으로 파견되었던 사행(朝貢과 親朝) 역시도 그

기원이 몽골제국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지적했다. 즉, 13세기 후반부터 고려가 몽골 조정에 매년 세 차례씩 사신을 정기적으로 파견하기 시작했으며, 원종을 위시한 후대의 고려 국왕들이 원 조정에 직접 찾아가서 조회했던 일련의 관행들을 명이 아예 정례화시켜 조공국들이 준수해야 할 규정으로 발전 및 적용했던 것이다. 따라서 조공체제라는 것도 종주국과 조공국 간에 지켜야 할 ‘의무사항’으로 알려진 규정과 원칙이라는 것들이 이처럼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원대에 ‘우연히’ 있었던 일들이 그 시초가 되어 관행처럼 굳어져 반복적으로 시행되면서 중국에는 하나의 제도처럼 자리매김하게 된 것뿐이었다. 특히 이는 장기간에 걸쳐 매우 점진적으로 일어났던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조공체제라는 것도 결코 한방에 만들어진 것일 수 없다. 만약 이 책의 저자 역시 이런 사실에 주목해서 15세기 명대 황제와 주변국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 조공체제 내 제도적 규정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우발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중대한 계기나 ‘획을 긋는 사건’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주었다더라면 좀 더 흥미로운 연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최근에 저자가 쓴 또 다른 저서인 『Korea and the Fall of the Mongol Empire: Alliance, Upheaval, and the Rise of a New East Asian Order』는 후속작으로서의 성격이 농후한데, 이 또한 주요인물 즉, 공민왕 왕기(王琦) (재위: 1351-74)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저자는 우리에게서 흔히 중국대륙에서 元明交替가 일어나고 있는 대외적 여건을 틈타 친원과 숙청, 정방 폐지 및 왕권 강화와 같은 일련의 개혁을 단행했던 고려시대 임금으로 알려진 공민왕이 집권 시기 동안 펼쳤던 개혁정치와 대원정책에 대한 ‘재고찰’을 시도했다. 비록 우리에게 친숙한 역사적 인물이긴 하지만 재고의 여지가 없지는 않아 보인다. 예컨대 그가 몽골식 이름인 ‘바얀 테무르’로도 알려져 있다는 사실 외에도 그는 칭기즈칸 귀족가문의 방계이며, 실제로 10년간 원 황제를 모셨으며, 자기 의사에 따라 몽골황족 출신의 노국공주와도 결혼했다. 이런 사실들을 감안한다면 공민왕의 ‘개혁정치’가 과연 원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와 몸부림이었는지 그리고 당시 친원적인 집권세력이었던 권문세족과는 얼마나 달랐었는지에 대해 재검토해 볼 여지는 있어 보인다. 실제로 저자는 공민왕의 정치활동을 당시 ‘동맹’이라는 관념의 변화에 주목해 가면서 재고찰을 시도했다. 오늘날의 동맹 개념과는 달리 공민왕의 재위시기에는 그 성격이 사뭇 달라서 기본적으로 수직적인 주종관계를 바탕으로 하되 서로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쌍무적 계약 관계’로서의 면모가 짙었다는 저자의 지적은 적절하다.

다만 이 대목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공체제의 제도적 규정으로 발전한 사건이나 에피소드의 중요성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 줬으면 좋았을 법했다는 생각이 든다. 예컨대 정동훈은 고려 공민왕이 먼저 表文을 올리고 冊封을 요청한 사건이 명청대 조공체제의 奉表稱臣과 책봉의 기원이 되었음을 밝혔다. 즉, 조공체제에서 중국과 주변국이 외교관계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서 주변국은 중국을 종주국으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뜻으로 ‘표문’을 작성해서 올려야 했으며 중국은 이에 대한 수락 의사를 ‘책봉’을 통해서 드러냈다. 이때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런 제도적 원칙 역시 처음부터 주변국에 적용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비록 주대부터 이미 존재하기는 했었지만 중국 영토 안에 있는 제후국들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것이었을 뿐 외국에도 그대로 적용할지를 두고서는 당시로서는 물론이고 원대 이전까지도 정해진 바가 없었다. 그러던 것이 원대에 이르러 공민왕이 비로소 표문을 먼저 올린 것이 그 시초가 되어 그 후 종주국과 조공국 간의 일종의 원칙으로 완전히 굳어진 것이다.

로빈슨의 신간 저서를 비교하는 것이 당초 목표는 아니었지만 두 권 모두를 읽어본 결과 그의 문제의식과 연구방식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한다. 그는 우선 ‘신청사’ 학자들에 의해 고립주의적이고 중원대륙에만 안주하려는 하나의 민족집단으로만 구성된 한족왕조로 명이 묘사된 점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이를 바로잡는 데에 천착했다. 특히 그는 5세기 이래로 중국의 역대왕조들이 모두 중국과 내륙아시아에서 유래

한 전통을 두루 채용해 자신들의 정치문화를 구축해 왔음을 지적했다. 결국 신청사 학자들이 청조의 독창성 내지는 차별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다른 한족 왕조들에게서도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는 팽창주의적이고 다민족적인 국가 성격을 축소 및 간과했던 것이다. 끝으로 저자는 다양한 종류의 사료를 두루 활용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한국어와 같은 새로운 언어까지 추가로 습득해 가면서 2차 자료에 대한 조사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나 분명 앞으로도 훌륭한 연구를 꾸준히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